



성실 창의 협동

# 가정통신문

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육성

교무기획부  
제2024-12호  
교무실 859-7114  
<http://iri.hs.kr>

##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안내문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다름이 아니오라,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, 누구든지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등의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부패·공익신고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, 인터넷 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
관계 법령에 따라, 부패·공익신고자는 그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 또한,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어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고 신분보호보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 부패·공익신고자는 부패신고 보상금, 공익신고 보상금, 포상금, 구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학부모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어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붙임 공익신고제도 홍보 리플릿

2024. 5. 14.

이 리 고 등 학 교 장



# 공익신고제도

(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)



## 신고 주체

누구든지(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)

## 신고 대상

### 공익침해행위

-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 위반행위
- ⇒ 불량식품제조·판매, 부실시공, 폐수 무단방류, 개인정보 무단유출, 기업간 담합 등

## 신고 기관

- 국민권익위원회
- 수사기관
- 관할 행정·감독기관(소관부처, 관할 지자체 등)
- 공사 등 공공단체
- 기업의 대표자·사용자 등

## 신고 방법

인터넷창에 **‘청렴신문고’** 입력

## 신고자 보호

- 비밀보장
- 불이익조치 금지
- 신분보호
- 책임감면

## 신고 보상금

- 보상 : 20억원 한도에서 벌금·과징금 등의 최대 20%(내부신고자에 한함)
- 포상 :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

## 문의처

- 국민권익위원회([www.acrc.go.kr](http://www.acrc.go.kr)) ⇒ 부패·공익신고 ⇒ 공익신고 상담
- 국번 없이 **110** 또는 **1398**
- 공익신고자 보호법, 신고사건 처리 : **044-200-7752~7761**
- 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 : **044-200-7772~7779**

# 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

- **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**

-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주의·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

- **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**

- 공익신고·협조를 이유로 신분상(해고 등)·인사상(징계 등)·경제적(계약해지 등) 불이익과 정신적·신체적 손상(집단 따돌림·폭행 등)을 받지 않습니다.
-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.
- 이를 위반할 경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**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.**

- 공익신고로 신고자·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형벌·징계·행정처분이 감경·면제될 수 있으며,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- **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

- 신고자·협조자와 그 친족·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**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.**

-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, 이사, 쟁송,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**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**

-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·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(최대 20억원)



국민권익위원회